

[Focus in]총무원장이 안 보인다

- '10·27 위원회'와 '종교평화선언' 문제에 총무원장이 나서야 한다

불교포커스

2012년 02월 27일 (월) 23:05:03

신희권 기자 ✉ jabiline@budgate.net

'인욕의 리더십'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에 대해 측근인사들이 붙인 정의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일도 대의를 위해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인욕의 리더십'이 회자된 것은 지금도 진행형인 명진스님 사건에 대한 대처에서 비롯된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두고 촉발된 갈등은 불교집안의 담장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사건의 한 당사자인 총무원장은 일체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할 말은 많지만 종단을 위해 사실이 아닌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총무원장에 대해 측근들은 '인욕의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이해 반해 총무원장과 생각을 달리하는 쪽에서는 '무능의 리더십'이라고 한다. 이익만을 쫓아 권력싸움을 하는 이들이 적절히 타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인욕이 아니라 무능한 것이고,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것 또한 말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총무원장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단정된 정의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분명한 것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리더십은 바람 잘 날 없는 조계종에서 계속 저울질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금권선거 논란으로 시끄러운 부산 범어사 차기 주지 선거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지금 총무원장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민간위원 교체 문제로 다름종인 '10.27 법안 피해자의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와 종교간 화합을 주도하겠다고 시작했다가 종단 내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10·27 위원회 문제는 민간위원 임기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다. '위원장의 일방적 월권행위', '교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치면서 자리싸움을 하다가 최근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현 위원들에게 유리한쪽으로 결론나면서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법제처의 판단을 놓고도 제각각의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법률적 결론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각각 총무원장의 동의 또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총무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종교평화선언 문제에 대한 총무원장의 태도 역시 인육의 리더십인지, 무능의 리더십인지 가능키 어렵다. 종정스님까지 관련된 문제로 비화되면서 '종교간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겠다는 불교계가 그 문제로 깊은 갈등에 빠졌다'는 위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종단 안팎으로부터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원장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기 초, 한 사석에서 종단 운영 원칙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모든 것을 종단이라는 공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문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될 때 까지 관여하지 않겠지만 종단에 해를 끼치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로 기억된다.

총무원장의 업무 원칙을 엿볼 수 있는 이 발언을 기준으로 볼 때 10·27 위원회 갈등과 종교평화선언문 문제를 대하는 자승스님의 리더십은 현재까지는 '무능'이다.

왜 무능인가?

적절한 과정만 거쳤으면 문제가 없었을 위원교체의 건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보상받는 데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자리싸움까지 한다'는 비아냥을 받는 10·27 위원회 사태를 종단의 위신을 깎아 내리는 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해 종정에게 드리는 편지사건으로까지 번졌던 문제가 또다시 절차적 하자로 불필요한 논쟁을 재연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 문제 역시 사익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닌데도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하는 것도 인육이 아니라 무능이다.

두 문제에 대해 지금 판단하고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종단이 기존 민간위원들과 계속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 후 그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든, 반대론자를 설득하든 간에 양자간 빠른 선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놓고 더 이상 '책임자에게 맡겨놓은 일인데...'라는 말로 변명하거나 관망하는 자세는 멈춰야 한다. 측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없이 종단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도 무능이 아닌 인육의 리더십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도 그렇다.

금권선거만 종단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관리를 넘어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선거를 향한 관심의 아주 일부라도 10·27 위원회 문제와 종교평화선언 논의의 방향잡기에 써야한다.

총무원장은 조계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무행정을 통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